

자주통일의 길

조국광복60년, 4월혁명45주년 논집 2005

- 발행처 : 사월혁명회
- 발행일 : 2005년 4월 15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한국의 농촌경제와 북한의 식량문제

김 준 기

(공동의장, 민노당 농업회생운동본부장)

1. 민족농업·통일농업을 외치는 우리 농민

지난 해 11월, 서울 여의도 한강 둔지에서 “민족농업 사수하고, 통일농업 일구어 내자!”라는 구호가 맑은 가을 하늘에 울려 퍼졌다. 민족 역사상 최대의 농민집회라고 일컬어지는 ‘30만 농민대항쟁’이 있던 날이다. 전국 각 지역에서 남녀, 노소, 허리가 굽고 노쇠한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참여한 15만여 명의 농민이 외친 장엄한 함성이었다. 이 날의 농민대회는 16대 대통령선거에서 남한농민들의 생존권적 요구를 관철하고자 하는 대정치집회였다. ‘쌀 수입개방을 반대하고, WTO 도하개발 아젠다(DDA) 농업 재협상을 촉구하며, 한·칠레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저지’하기 위한 결전의 장이었다. 그야말로 한국 농민운동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 집회였다.

이 같은 대규모 집회에서 농민들이 ‘민족농업’과 ‘통일농업’을 외쳤다고 하는 것은 남한의 농업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구호라고 하기에는 대단히 의례적이었다. 지난 날 남녘땅에서는 그렇게 들어 볼 수 없었던 지극히 감동적인 구호였다. 이는 남한 농민만의 외침이 아니라 남북한 7천만 우리 민족 모두가 함께 외쳐야 할 전 민족적 구호이며, 민족의 자주권과 농민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한 역사적 과제라는 사실을 일깨워 준 일대사건이 아닐 수 없다.

농민의 구호만이 아니었다. 전체 농민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아오르게 하고 투쟁의 열기를 한층 들떠 오르게 한 힘찬 ‘농민가’였다. 필자가 ‘60년대 초 농민운동을 전개하면서 전국적으로 전파하기 시작한 “농민형제의 노래(農土團歌)”가 40여 년이 된 지금, 서울의 하늘에서 울려 퍼졌을 때, 오직 한길 농[一農]의 길을 걸어온 사람으로서 그 감회야말로 표현키 어려웠다. 실로 웅장하고 장엄했다.

또한 이날 참여한 우리 농민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앞으로 농촌·농업정책 더 이상 방관하지도 않을 것이며, 침묵할 수도 침묵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한판 싸움의 의지와 강한 결의를 확인케 하는 그것이었다. 이날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 대선 후보로서 운집한 농민들에게 “한국 농업 반드시 살려 내겠습니다”라고 했다. 만신창이가 된 한국농업을 어떻게 살리겠다는 것인가.

문제는 노무현 정권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농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데 있다. 과거 역대 정권이 다들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문민정부의 김영삼 대통령도 “UR협상에서 쌀만은 막아내겠다”고 했고, 국민의 정부 김대중 대통령도 “농가부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했으나 대선 때 공약은 헛공약이었을 뿐이었으니까... 물론 속는 한이 있더라도 노무현 대통령만은 믿어 봐야 하지 않겠는가. 또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하는 농민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그 기대는 환상적 기대일 뿐이라는 것이 다수 농민들의 생각이다. 노무현 후보에게 가한 농민들의 계란 세레가 역대정권의 농정실패와 농정부재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우리(남한)농민이 민족농업, 통일농업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결코 일시적 충동에서 외친 구호가 아니었다.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켜내고자 하는 열망의 표출이었다. 남한의 농업·농촌·농민문제나 북한의 식량난을 위시한 경제난 문제는 다 같이 외세에 의한 민족분단으로 비롯된 것이며, 민족의 자주적 통일만이 우리 민족의 살 길임을 자각한 남한 농민대중들의 심중에서 끌어 오르는 ‘반외세 민족자주의 대함성’이 아니겠는가. 더욱이 6.15 공동선언 이후 남과 북 농민 사이에 고조되고 있는 민족의 자주적인 통일의식과 남과 북이 공조하여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쟁취하고자 하는 민족자주정신의 발로인 것으로 우리 모두 받아 안아야 할 것이다. 이는 남·북한 농업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상황을 깊이 있게 살펴보면 쉽게 결론지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면 한국의 농촌경제와 북한의 식량난의 실상은 어떠하며, 그 문제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길은 무엇인가.

2. 한국농업·농촌경제의 실정 어떠한가

한국의 농촌·농업·농민 현실을 두고 “총체적 위기상황이며 전체적으로 붕괴 직전이다” 심지어 “더 이상 돌파구도 없고 빠져나갈 길도 방법도 없고 끝장났다”고들

말한다. 왜 그런 말을 하는 것일까. ‘농업의 쇠퇴와 몰락’, ‘농촌의 황폐화와 공동화’, ‘농민의 노령화와 부채’, ‘농가경제의 침체와 부채의 증가’ 이것이 오늘의 한국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물론 지난 50여 년간 농업·농촌의 형편이 외형적으로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다. 해방 후 식량난으로 표현되는 40~50년대 보릿고개도 해소되었고 농업생산력도 향상되었다. 농업경영형태도 ‘자급자족적 농업’에서 ‘상품생산적 농업’으로 변천해 왔고, 최근에는 ‘농업의 산업화와 기업화’로까지 진전하고 있다. 농업육종기술과 생산재배기술 등 농업과학기술도 놀랍게 발전하였으며 농기계, 비료, 농약, 종자, 비닐 등 농업 관련 산업도 놀랄 수준으로 발달하였다. 물론 농민의 재배기술 수준과 경영의식도 대단히 향상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외형적인 성장 발전에 비하여 농업 내부에는 농지소유제도와 농산물시장 유통구조 등 많은 구조적 모순과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60년대 이후 추진된 산업화·공업화·도시화·근대화 경제개발정책으로 고도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경제성장과정에서 농업은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위축되어 농촌·농가경제는 파탄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두고 많은 관변학자들과 경제정책 담당자들은 자본주의 성장발전과정에 있어서 농업은 상대적으로 쇠퇴할 수밖에 없고 경제성장을 하려면 농업의 희생은 불가피하다고 하는 불균형성장 논리와 농업의 쇠퇴론을 주장하여 왔다.

가. 오늘의 농촌경제 현실과 그 구체적 실상

1) 농가경제의 불안정과 날로 늘어나고 있는 농가부채문제

농가경제가 불안하고 농가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농가소득이 악화되고 농민의 복지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가경제의 상황과 농민의 경제적 복지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인 농가소득 수준을 살펴보면, 1996년에는 23,298천 원이었던 호당 농가소득이 1998년 IMF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20,494천 원으로 28%나 하락하였다. 그 후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2001년에는 23,072천 원 수준이다. 문제는 농가소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타 산업종사자 특히 도시민의 소득수준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상대적으로 빈곤한가 하는 문제이다. 도시 도시근로자의 소득과 비교했을 때, 2001년 호당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의 76% 수준이며 그 격차가 확대되고 악화되고 있다. 그리고 농가소득 중에 농가의 가처분소득을 보면 1996년에 비해서 2001년에는 1.25%나 하락하였고, 농

가경제잉여 역시 1.18%가 낮아졌다. 더욱이 농촌의 경지규모별 농가계층간의 소득 수준을 보면 1996~2000년 사이에 그 격차가 더욱 확대 심화되어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0.5ha 이하의 농가인 최하위 20% 계층의 농가소득은 -24.5%로 낮아졌으며, 이들의 소득수준은 도시 최하위 계층의 소득에 51% 수준밖에 되지 않고 있다. 농촌의 상위 40% 계층의 농가소득은 전보다 상승하였다고 하나 도시 근로자가구의 중간 수준을 상회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농가부채는 1996년에 비해서 2001년에는 지난 5년 동안 무려 74%나 증가하여 20,376천 원이나 된다. 그 중에 생산성 부채는 74%를 차지하는 반면 농민의 생존과 관계되는 가계성 부채가 19,2%나 되어 지난 5년간 약 7.2%나 증가하였다. 이것은 생계비 부족을 부채로 충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농가부채가 증가하고 농민의 가계생활조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은 농산물의 상대가격을 나타내주는 농가 교역조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업소득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현실(47.2%)을 감안할 때 매년 농가교역조건이 하락하여 2000년에는 86.0%로 하락하였다는 것은 농가판매가격 총 지수에 대한 농가구입가격 총 지수가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가의 농업 조수입은 지난 5년 동안 21.9% 증가한 데 반하여 농업경영비는 55.5%나 증가하였다. 농산물의 가격보다 농기자재 값과 노임 등 경영비의 증가폭이 상회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그 동안 농산물의 생산성은 향상되고 공급량도 증가하였으나 전체 농산물의 실질 가격은 8.0% 하락하였고, 반면 농자재비는 4.1% 인상되고 농업노임은 36.1% 증가하였다. 따라서 농가부채는 악순환의 고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농산물 가격은 불합리한 농산물 유통구조와 상업자본이 지배하고 있는 시장의 구조 하에서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데다가 1980년대 이후 수입농산물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급격하게 증가되어 왔고, 2004년 WTO/DDA 농업재협상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상(FTA)체결 비준 결과에 따라 국내 농산물 가격은 더욱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농가의 농업소득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52%인 것을 감안하면 쌀 수입이 전면 개방될 경우 국내 미곡생산기반은 물론 농가경제의 파탄은 예견하고도 남는다.

2) 농업인구의 감소와 농업노동력 노령화

60~70년대 고도 경제성장 이래 농촌 농민의 이농 및 탈농 현상이 급격히 일어났다. 그 이후 농업인구는 계속 감소하여 현재 농촌의 농업노동력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다. 2002년 총 농가인구는 359만 명이다. 1970년 전체 인구에서 45%를 차지하던 농가인구가 지난 30여 년의 산업화 기간에 무려 7%로 낮아졌다. 물론 주요 선진국의 2~5%보다는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하지만, 현재 농촌에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32.2%나 되고, 50세 이상의 농업인구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자연인구 감소율을 감안하면 농업인구는 더욱 감소할 것은 물론이며, 농업경영주의 고령화 추세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농촌에는 농사지을 젊은이가 없고 농업노동력이 빠르게 노령화·부녀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젊고 유능한 농촌인력이 대거 이농함으로써 농업노동력이 노령화되고 농촌여성의 농업노동 참여가 늘어나 농업노동력의 질적 저하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농업에 기계화가 많이 진척되고 농기계 보급률도 상당히 높아져 농민의 육체노동의 부담이 줄어들고 노동의 강도도 그전에 비하여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호당 경지규모가 영세하고 또 현재의 농가 경제사정으로는 농기계구입에 따른 과중한 농가부담이 되고 있는 데다가 농촌의 농기계 이용조직이 미흡하여 농업기계화를 통한 노동생산성의 증가를 기대하기는 극히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아직도 기계화가 불가능한 생산부문에서는 심한 육체 노동을 필요로 하고 있다. 더욱이 과학영농시대에는 농기계를 다룰 수 있고 젊은 고급두뇌 노동력이 절실히 요구되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이 높은 농업인구는 150만 명(31.4%)에 불과하다. 그나마 이 연령층도 비농업부분으로 이동할 대기인구일 뿐이다.

3) 농경지 면적의 급격한 감소와 유희농지의 증가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농업에 있어서 농지의 중요성은 감소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농지는 분명 농업의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이다. 그런데 1970년대부터 도시의 외연적 확장과 공업화, 산업화에 따른 토지의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농경지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0년 말 현재 남한의 총 경지면적은 189만ha에 지나지 않는다. 그 가운데 향후 농지전용 허가 가능면적과 지금까지의 농경지 감소추세로 봐서 10년 내에 179만ha으로 1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견된다. 벼 재배 면적도 1980년대 이후 과수, 시설채소 등 전전환 면적이 확대되어 매년 줄어들었다. 쌀 수입 전면개방에 대응한 쌀 생산조정(감산) 정책의 시행이 강화되고 휴경답에 대한 보상제도가 확대되면 쌀농사를 포기하는 농가가 크게 늘어나게 될 것이고 따라서 벼 재배면적은 급격히 감소될 것이다.

더욱이 경자유전의 원칙이 폐기되고 농지의 소유와 거래가 자유화되고 있는 상황

에서는 농경지의 감소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그리고 헌법으로 금지되고 있는 과거 소작제도 하의 소작농과 내용상으로는 조금도 다름없는 임대농가가 1970년대부터 합법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여 지금 현재 임대농가의 비율이 전체 농가의 70%를 상회하고 있고, 임대농지가 무려 45%나 된다. 일종의 소작료인 임대료도 40~50%의 높은 지대를 임대농가가 부담함으로써 농가경제의 궁핍화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4) 국내 농산물의 식량자급도 저하와 수입농산물의 급격한 증가문제

국내 양곡의 총 수요량은 최근 2,000만 톤 수준이다. 이 중 1,400만 톤은 수입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600만 톤 가량은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다. 2000년 곡물 총생산량은 양곡 583만 톤인데 쌀의 생산량은 510만 톤으로 87% 정도이다. 2001년도 전체 곡물 자급도는 29.3%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쌀을 제외하면 5%에 불과하다. 수입 곡물 1,400만 톤 중에 사료용 곡물이 1,000만 톤이고, 식용으로 쓰이는 밀과 옥수수가 400만 톤이다. 그 중에 밀은 99.9%가 수입밀이며, 콩은 85%, 옥수수는 95%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간 쌀만은 나름대로 자급되어 왔는데 1995년 UR협상 이후 쌀에 대한 의무수입물량(MMA) 규정에 따라 해마다 쌀 일정량을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런 반면 국내 쌀 소비량은 계속 감소하여 2000년부터 쌀 재고량이 소비량을 초과하는 사태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쌀 과잉 재고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쌀을 가축사료화하려는 방안을 논의하는가 하면 휴경답에 대하여 보상까지 하는 쌀 소득 직불제를 마련하는 ‘쌀 감산 조정정책’을 세우기에 이른 것이다. 남아도는 쌀을 식량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북한동포에게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 남한 정부는 일부 수구 반통일 세력의 북한체제를 돕는 ‘퍼주기’라는 여론에 밀려서 인도주의 차원의 대북 쌀 지원정책을 주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농민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일부 민간 단위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북한(우리겨레)돕기사업이 없지는 않았지만 특히 지난 해 전국 농민회 총연맹이 주관하고 민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여 북한동포에게 ‘통일 쌀 나누기’ 운동을 전개한 것은 대단히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단순한 시혜 차원에서가 아니었다. 북한 동포의 고통을 함께하며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남쪽 농민의 순수한 동포애와 자주통일운동 차원에서 전개한 이 운동에 대하여 방관하거나 힐난하는 행위는 민족의 양심으로 지탄받아야 마땅한 일이다.

나. 오늘의 농촌·농업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한국의 농업문제는 해방후 미군이 진주하여 미 군정청을 세우고 한반도를 분할 통치하면서부터 잉태되기 시작하였다. 친미정권이 수립되고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구축되면서 한국의 경제는 미국의 자본주의 경제질서와 체제 속에 편입되어 예속화와의 과정을 밟게 되었다. 따라서 지난 50여 년의 남한의 농업정책은 미국의 농업정책의 일환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한국의 농업은 그들의 이해와 맞물려 대외의존과 종속, 침체와 몰락의 과정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 물론 한국의 농업문제는 한국농업의 내재적 요인과 구조적 모순이 없지 않다. 그러나 한국 농업의 본질적 문제는 국내의 독점자본과 한국 소농과의 모순에서 유발된 것이다.

그러면 한국농촌, 농업, 농가경제의 침체, 붕괴, 몰락 과정과 원인을 시대별 농업정책과 그에 따른 충격을 통해 살펴보자.

1) 미국 잉여농산물에 의한 한국농업의 충격

8.15 이후 50년대와 60년대 초기까지의 한국의 경제는 무상원조라는 명목으로 공여된 미국 잉여농산물에 의존한 원조경제시대였다. 국내에 반입된 잉여농산물은 국내시장에 판매되어 대충자금으로 전환되고 그렇게 조성된 대충자금은 미군정 및 재외 공·관원과 주한미군의 유지비와 체재비, 이승만 단독정부수립과 자유당 독재정권의 물적 기초로 사용되었다. 물론 한국정부의 국가재정으로도 운용하였다. 그러나 그 국가재정자금도 주한 미국 정부기구의 감시 감독과 승인 하에 정부예산이 편성되고 집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미국 잉여농산물이 국내 농산물시장에 값싸게 유통되면서 국내 자급농산물 가격의 하락을 압박하여 식량자급 기반과 기회를 상실함은 물론이고 농산물 가격의 하락은 농가경제 파탄은 물론 한국농업을 붕괴의 길로 치닫게 한 것이다. 미국 잉여농산물의 주된 품목인 원맥, 원면, 원당 등은 소위 삼백산업이라고 하는 제분, 제과제당, 방직산업의 발전을 가져온 반면 국내에서 자급되던 밀, 목화 생산은 급격히 줄어들고 지금 현재 그 생산이 절멸상태로 무너져 버린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미 경제협조의 일환으로 원조 도입된 화학비료로 인하여 그 동안 자급되비로 농사를 짓던 농가로 하여금 화학비료에 의존하는 농업으로 전환하게 하였고 그 결과 농가의 영농비 부담을 가중시켰다.

결국 미국의 무상원조정책에 의한 잉여농산물은 결과적으로 미국 원자재에 의존하는 국내 몇몇 신흥독점재벌과 지배권력층의 축재를 양산하였을 뿐, 그 본질에 있

어서는 미국의 한국경제 침탈과 한국농업의 지배와 예속화를 위한 장·단기 책략의 무기였던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50년 한국전쟁과 전후 전쟁후생복구를 위한 미국의 무제한 무상원조정책은 세계 2차대전 후 미국의 농업공황과 군수산업의 침체를 극복하려는 자국의 경제부양책과 경제적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책략이었으며 한국농업을 말살하고 한국을 중·장기적으로 지배하고 통치하려는 전략적 수단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2) 고도경제성장과 산업화에 따른 충격

5.16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독재정권이 펼친 60~70년대의 경제개발정책은 산업화·공업화 중심의 수출지향 경제성장정책이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고도경제성장, 일명 압축경제성장 과정에 농업부문의 역할은 지대하였다. 한때는 농업의 역할에 대해 그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중농정책과 농공병진정책을 내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불균형성장이론에 근거한 농업의 희생정책이었다.

정부가 추진한 핵심 농업정책은 식량증산정책과 외국 농산물의 차관도입 확대를 통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가격안정을 지향하는 정책이었다. 정부의 식량증산정책은 농가소득의 안정을 명분으로 쌀 이중곡가제도를 실시하는 한편, 해마다 식량증산계획을 수립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하였다. 새로이 육성한 통일벼 계통의 저질 다수확 품종을 전면적으로 보급하고 모든 행정력과 지도인력을 동원하여 강제농정을 펼쳤다. 그렇게 해서 이른바 쌀 증산 목표 달성이라고 하는 녹색혁명을 성공(?)시킴으로써 정부의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가격안정정책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도시소비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물가안정정책의 수단일 뿐이었으며 저농산물 가격정책이 그 핵심이었다. 정부의 지속적인 저농산물 가격정책은 결국 농가소득의 저하와 농가경제 침체를 가져온 필연적인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수년 동안 누적된 농가경제의 악화는 농민의 농업생산 의욕을 떨어트리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대화, 도시화의 바람을 타고 대규모 이농현상과 탈농을 유발하게 하였다. 도시로 이주한 이농민들은 곧 비농업부문에 질 좋고 값싼 노동력 공급의 원천이었다. 이들 이농민들은 도시 노동자들의 취업기회를 위협하였을 뿐만 아니라 저노임 고용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중국에는 도시 주변부의 저소득 빈민층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부의 농업정책의 기초는 저농산물 가격정책의 일환이었으며 저농산물 가격정책은 근로노동자들의 최저임금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저노임정책의 수단이었다. 그리고 저노임정책은 바로 제조업 부문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생산비 절감정책과 정부의 수출지향 경제성장정책의 기초이고 독점자본의 이윤추적 수단이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60~70년대 고도·압축경제성장은 농민과 노동자의 희생을 전제로 한 수출지향 경제성장정책의 결과물이며, 그렇게 해서 이룩한 도시화, 근대화, 산업화는 정부의 불균형성장정책의 산물인 것이다. 결국 고도경제성장과 지역간, 산업간, 계급계층간 불균형성장은 도시와 농촌, 농업과 비농업, 농민과 비농민간에 소득과 생활수준의 격차를 심화시켜 왔다. 이러한 결과적 사실이 바로 농촌, 농업, 농민의 희생 위에 고도경제성장을 해왔다는 것을 말해준다.

3) 80~90년대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에 따른 충격

90년대에 들어오면서 세계화, 국제화라는 말이 정책 화두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전두환 정권이 쿠데타로 집권한 80년대 초기부터 미국이 국내 농산물시장에 대한 개방 압력을 본격적으로 가해 오면서 세계화와 개방화의 물결은 밀어닥치기 시작하였다. 전두환 군사정권의 제5공화국은 종래의 경제개발정책을 경제사회개발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으나 그 본질에 있어서는 저농산물 가격과 저노임정책을 기본 골간으로 한 수출지향적 경제성장정책이라고 하는 기존 정책과 한 치도 다를 바 없었다.

5공 정부의 농업정책의 주요 기조는 미국의 수입농산물 개방 압력과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농산물에 대한 시장개방농정이었다. 개방농정의 특징은 박정희 유신정권의 주곡(쌀) 위주 농산물 증산을 위한 강제농정을 철폐하는 대신 외국 농산물의 수입 확대와 농산물 시장 유통구조개선정책을 통한 농산물 가격안정정책이었다. 결국 개방농정은 국내 주곡자급생산에 의존하던 저농산물 가격정책을 수입농산물에 의존하는 저농산물 가격정책으로 바꾸어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정책으로 전환한 것이다. 통일벼 계통의 다수확품종 재배를 강제하던 쌀 생산을 농민의 의사에 따라 시장성이 높은 일반벼를 선택하여 재배할 수 있게 자율화하는 대신 정부의 추곡수매가를 동결하고 저미가정책을 계속 유지하였다. 저미가정책에 따른 농업소득의 하락에 대한 정부대책으로 축산, 과수, 시설채소 등을 결합한 복합영농을 적극 권장하고, 특히 10대 전략 작목을 중심으로 한 농업소득증대와 농촌에 농공단지조성 정책을 추진하여 농업노동의 취업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농외소득을 늘리려는 종합적인 농가소득증대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83년의 소값 하락 파동을 위시해서 배추, 고추, 마늘파동을 겪게 되었고, 농공단지육성정책을 통한 농외소득 증가는커녕 오히려 농촌의 농업노임인상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농가경제는 한층 파국의 길로

치닫게 되었다.

80년대 후반의 농업정책 역시 개방농정에 의한 경제성장정책 기조의 변화 없이 농가경제 몰락에 따르는 농가부채경감대책, 농어민 의료보험제도 도입, 영세농가 학자금지원, 수세경감, 추곡수매가와 수매량 결정의 국회 동의를 얻는 미곡유통관리법개정 등 농어촌경제활성화종합대책을 추진하였으나 지속적인 농산물 수입개방과 저농산물가격으로 농촌의 몰락과 농업의 쇠퇴, 농민의 부채라고 하는 극한상황에 처하게 된다.

더욱이 8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UR협상과 90년대 초 WTO가 창설되면서 한국농업은 세계화라는 국제규범에 편입되고 국제 농산물 시장에서 무한경쟁체제 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로써 한국농업은 미국을 주축으로 한 케인즈그룹(농산물 수출국) 국가와의 무한경쟁체제하에 개방되고 국내 농산물시장은 국제 농산물시장을 지배하는 초국적 곡물독점자본의 압력에 예속화를 더욱 강요받게 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UR/WTO체제하에서 무너져 가는 농어촌의 종합발전대책의 일환으로 42조 원의 농어촌 지원 정책자금과 농어촌 특별교부세 기금 15조 원을 투입하여 국내 농산물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농업구조조정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농촌경제는 오히려 농가부채만 더욱 급증하게 되었고 농가파산을 더욱 촉발시켰다. 누적되는 빚에 못 이겨 자살까지 하는 농민이 발생하는가 하면 농촌의 농가일가족이 공동 또는 상호 보증한 이웃농민과 더불어 야반도주하는 일이 농촌 곳곳에 빈번하게 일어나게 했다.

4)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덫

UR/WTO체제에 편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1995년, 김영삼 정부는 OECD에 가입하고 “우리나라도 중진국이 되었다”고 삼페인을 터뜨리며 야단법석을 떨었다. 그때부터 한국경제는 국제금융독점자본의 덫에 걸려들기 시작하였다. 1997년 말 결국은 역사상 최대의 국난이라고 하는 환난을 맞게 된다. 그래서 1998년, 국제 헤지펀드와 IMF구제금융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운명에 처하였으며, IMF관리체제하에 나라의 경제를 맡기는 국치를 당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IMF 환난과 외환위기 속에서 농촌 농민은 노동자와 함께 가장 어려운 고통을 당하게 되고 최고의 고통분담자가 되었던 것이다.

정부는 IMF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전 부문에 구조조정정책을 추진하면서 농업부문에도 추진하였다. 농·축·인삼협동조합의 통폐합을 단행하고 농업회사 및 조합법인 설립법을 제정하여 농업구조개혁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농업연구 및 지도기구

의 역할을 축소조정을 하는 등 농업관련 행정기구를 구조조정 하는 한편, 담배인삼 공사의 민영화와 각종 농자재 사업(비료, 농약 종자, 사료 등)을 국제독점자본에 팔아넘기는 정책을 감행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정책들도 결과적으로는 농업회생정책이라기보다는 농업을 포기하는 탈농업정책일 뿐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는 없었다.

더욱이 WTO 뉴 라운드가 출범되고 현재 DDA 농산물 재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2004년 쌀 개방은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되고 있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도 이미 양국 대통령간에 체결되어 국회 비준절차만을 남겨 두고 있다. 거센 농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될 전망이다. 그렇게 될 경우 한국농업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덮에 완전히 걸려 꼼짝달싹 못 하는 꼴이 될 것이며, 한국농업은 그야말로 끝장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지고 마는 것이다.

3. 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는 어떠한가

북한은 정부를 수립한 이후 곧바로 전통적인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확립하고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발전시켜 나갔다.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체제 확립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토지를 무상몰수하고 무상분배하는 토지개혁과 농업의 집단화, 그리고 각종 산업의 국유화와 무역의 국가독점, 계획경제의 도입이었다. 북한의 농업정책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농업의 사회주의화와 식량과 원료의 자급자족을 통한 자립적 경제체제의 구축을 주요 방향에서 추진되었다.

해방 이후 북한의 농업정책 방향과 중요한 특징은 ‘농업혁명 과정으로 간주되는 1945년의 토지개혁을 통하여 농촌에 봉건적 토지소유관계와 자본주의적 요소를 청산하고 사적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로 확립하는 것이었으며, 1958년에 완수한 농업협동화, 1964년 이후 추진된 토지의 협동적 소유로부터 전인민적 소유체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농민은 소소유자로서의 농민이 아닌 농업근로자로서의 노동자계급으로 정착하였다.

초기에 북한 농업의 기본정책은 농촌 농업을 자립적 민족경제 노선을 관철하는 강고한 원료기지로서 설정, 제시하고 농업생산력 향상과 그에 관련된 제반 시책에 주력해 왔다. 1960년대에 들어와서는 농업의 기계화, 수리화, 전기화, 화학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동시에 기술혁명을 통해서 농업생산의 과학화와 집약화를 통한 농업부문의 급속한 성장을 기본정책목표로 하였다. 이와 같은 농업 기본정책은 1970년

대에 들어오면서 곡물생산이 증가되는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났으며 이 시기가 북한 농업이 가장 발달한 시기였다. 그 후에도 농업의 현대화와 농업의 공업화, 농업생산의 과학화와 집약화를 농업정책의 기본방침으로 추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부터는 북한의 농업생산이 1970년대와 비교하여 급격히 정체 또는 점진적 하락 현상을 보이면서 식량사정이 심각한 상태로까지 악화되었다. 그러면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가. 북한농업의 생산양식과 농업체제의 결함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외적요인에 기인한 것인가. 북한의 식량사정과 현황, 그리고 북한 농업정책의 변천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그 본질적 문제와 원인을 규명해 보아야 하겠다.

가. 북한 농업정책의 변천과정과 시대별 특징

1) 농업의 사회주의화와 토지개혁

해방 이후 50년대의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건설과 6.25전쟁을 치르면서 토지개혁과 농촌의 사회주의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낸다. 1946년 정부는 종래의 소작제도를 철저히 폐지하고 지주로부터 농민을 해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여 봉건적 토지소유관계를 청산하고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는 농민에게 무상분배하는 토지개혁을 철저히 단행하였다. 1950년대 초 농정은 농촌의 사회주의적 개조라고 할 수 있는 농업협동화를 수행하는 한편 전시 농산물 공급을 위한 농업생산에 주력하였다. 이에 땅을 분배받은 농민들은 높은 생산의욕을 보였고 농업생산도 놀라운 기록을 나타냈으며, 1958년에는 농업의 협동화, 즉 협동농장화를 완수하여 농업의 사적 생산관계를 말끔히 해소하였다.

2) 농촌의 3대 혁명과 농업강령

60년대 북한은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보장과 경공업, 농업의 동시발전을 추진하는 사회주의제도의 건설기라고 할 수 있다. 농업에 있어서는 농업의 협동화 작업이 마무리되자 농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는 목표 아래 1964년 2월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라고 하는 소위 농업강령을 발표하였다. 사회주의가 당면하고 있는 농민문제와 농업문제는 농업의 낙후성과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에 있다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기본원칙으로 농촌에서의 기술혁명, 문화혁명, 사상혁명을 수행하고, 농업에 대한 공업의 지원과 농촌에 대한 공업의 지원 강화, 그리고 협동적 소유형태를 점차적인 ‘전인민적 소유’로 바꾸는 국유화정

책을 추진하는 것을 강령으로 내세우고 있다. 또한 이 강령을 실천하는 방안으로 농촌의 기계화, 수리화, 전기화, 화학화를 추진한 것이다. 이때 전개한 운동이 천리마운동으로 협동조합의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말한다. 이 운동으로 1967년 북한의 경지이용률이 166.4%의 기록을 세웠다.

3) 농업생산의 침체와 주체농법

그러나 60년대 말부터 북한의 농업생산이 정체 또는 퇴보현상을 보이기 시작하자 북한정부는 1976년 10월 절대경지 면적확대와 토지이용률 제고를 내용으로 한 자연개조 5대방침을 결정하고 곡물증산을 위한 장기적인 농업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1977년부터 ‘주체농법’이라고 하는 과학적인 기술체계를 제시한다. 적지적작·적기적작, 기후 및 토양조건에 따른 농업지대를 세분화하고 생물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작물을 계획적으로 배치하고 토지개량과 지력 향상을 기하고 포기농사(밀식재배)를 하는 등 과학농법과 집약농법을 내용으로 한 영농방법과 원칙, 지도·관리에 관한 방침에 관한 것이다.

4) 4대 자연개조사업과 농업생산의 현대화

80년대 북한의 농정은 식량증산과 농촌문제해결을 위하여 주체농업을 보다 강력하게 실현하는 한편, 1981년 30만 정보의 간석지 개간과 20만 정보의 새 땅 찾기, 남포갑문설치, 태천발전소 건설사업 등 ‘4대 자연개조사업’을 새로이 제기한다. 이처럼 북한은 1982년에는 “쌀은 곧 공산주의이다”라고 선언하고, 1986년에는 종래의 ‘의·식·주’ 용어를 ‘식·의·주’로 바꾸어 사용하면서 알곡고지점령(식량증산)을 위하여 지속적인 농업생산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농경지 확대와 관계시설망 확충 등 대자연개조사업을 통해 추진하였다. 그러나 경지면적 확대의 한계와 한랭한 기후조건, 농업자재의 적기공급 미흡 등으로 식량문제 해결에 난황을 겪는다.

5) 혹심한 기상재해와 식량난의 심화

90년대에 들어와서도 농업의 주체화, 과학화, 현대화를 계속 추진하면서 식량증산에 주력했다. 당시 김일성 주석은 신년사를 통해서 1992년을 ‘대농의 해’로 정하고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1993년 냉해피해와 1994년 우박피해, 1995~96년 연이은 극심한 홍수피해로 막대한 식량난을 당하게 된다. 이때부터 북한의 식량사정은 견잡을 수 없이 악화되어 심각한 상태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이에 북한은 ‘하루 두 끼 먹기 운동, 허리띠 졸라매기 운동, 1인 1식 국수 먹기 운동, 여름에 남새밥 겨울에 김치밥 먹기 운동’ 등을 전개하면서 식량난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그 동안 북한은 부족한 식량을 중국, 러시아로부터 국제가격 1/3에 해당하는 ‘사회주의 국가간 우호가격’으로 상당한 양을 수입하였다. 그러나 1994년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추세와 중국이 자국의 흉작으로 인한 식량부족과 경화 결제를 요구해 옴에 따라 외화가 부족한 북한으로서는 식량도입마저 어렵게 되어 식량난은 더욱 가중된 것이다.

6) 강성대국 건설과 농업혁명방침

최근 북한의 농업정책 방향은 99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농업생산을 강성대국 건설의 천하지대본으로 규정하고 당과 국가의 지도, 지원 원칙을 새삼 강조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식량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밝혔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1999년 1월에는 농업이 인민 경제발전에 있어서 차지하는 위치와 중요성과 농업 발전의 주요 원칙을 규정하는 ‘농업법’을 제정하고 국가가 농업생산과 생산물 관리를 철저히 인민대중의 요구와 사회주의 제도의 본성에 맞게 행할 수 있는 확고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1999년 공동사설에서 제시한 종자개량, 감자증산, 두벌농사(2모작) 확대, 토지정리 등 농지정책과 농업생산정책에 초점을 둔 농정추진과제를 2002년부터는 당의 농업혁명방침으로 종자혁명, 감자농사혁명의 지속적 추진, 알곡-알곡을 기본으로 한 두벌농사 확대, 초식가축사육 중심의 축산발전, 양어사업의 전 군중적 운동, 토지정리사업, 물길공사 조기완공,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 복합미생물비료의 이용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설정하고 주체농법의 철저한 관철과 농업생산의 획기적 증대라는 농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관철하고자 하였다.

나. 북한의 농정과정 속에서의 식량 생산현황과 식량사정

북한은 1946년 토지개혁을 마무리한 이후 1948년에 식량자급의 기반을 마련하고 60~70년대까지는 식량생산이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였고, 1987년에는 식량생산량이 1,000만 톤 가량 증가하여 46년도 생산량의 2.5배나 증가하였다고 한다. 그러다가 1992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2년에 500만 톤, 93년 380만 톤으로 감소하였고 1996년~97년에는 300만 톤 이하인 270~280만 톤 이하로 떨어

어졌다. 그러다가 최근에 2001년도의 식량생산이 전년도 대비 42%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02년에도 1995년 이후 가장 작황이 좋았다고 하나 360~380만 톤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러면 북한은 당국의 지속적인 식량증산 노력에도 불구하고 왜 식량난을 겪고 있는가.

북한의 2,330만 동포에게 필요한 식량(곡물) 총 소요량은 인구 1인당 167kg 정도 소비하는 것으로 계산하였을 때 최소한 연간 480~500만 톤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현재 국내생산량이 400만 톤 미만의 수준으로 머문다고 했을 때는 최소 소요량보다 연간 100만 톤 내지 200만 톤이 모자라는 식량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 북한 식량생산 수준에서 주민의 영양상태를 보면 1일 평균 섭취열량이 2,170kcal로 남한의 3,060kcal 비하여 극히 낮은 수준이며 최소한 활동에 필요한 열량인 1,890kcal를 섭취하지 못하는 굶주리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 수준인 7.5백만 내지 8.8백만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 중에 5세 미만 어린이의 60% 정도가 체중미달이며 6개월에서 7세에 이르는 어린이의 2/3가 만성적인 영양실조 상태에 있으며 그들 가운데 16%는 위험한 영양실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은 국제기구에서 자연재해와 국내외 사회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90년대 이후 만성적인 식량난에 시달리는 식량부족 국가의 대표적인 나라로 분류되고 있다. 북한주민의 지속적인 식량난은 주민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광범위한 기아는 중국에 경제난을 가져오게 하는 악순환을 지금 북한은 겪고 있고 또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다. 북한 식량난의 원인과 그 해결책

1) 북한의 농업생산 기반과 조건

첫째, 농업생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인 북한의 농지면적은 205ha로서 전체 국토면적 1,205만ha 중 15~6%밖에 되지 않는다. 그 중 논면적은 141ha이고 밭은 59ha인데 실제 곡물재배 가능 경작면적은 140만 내지 170만ha에 불과하다. 따라서 북한은 부족한 농경지를 외연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70~80년대에 대자연 개조사업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30만 정보의 간척지 개간사업은 90년대 이후 경제사정 악화로 투자자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6~7만ha밖에 늘리지 못하였으며 앞으로 큰 진전이 없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경사도 30% 미만의 산지를 이용하여 다락밭을 일구어온 20만ha의 새 땅 찾기 운동도 무리한 산림 훼손으로 인하여 90년 중반 계속된 홍수로 극심한 산사태와 토양 유실을 빚게 되고, 농지가 매몰되고 붕괴

되는 등 연속적인 불행과 피해를 당하여 제대로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래서 당국은 농지의 외연적 확대 대신 식량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90년대 말부터 경지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혼작 및 간작과 두벌농사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10.2ha에 지나지 않는 이모작 면적을 알곡-알곡을 기본으로 한 이모작재배 면적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해마다 크게 증가하여 2002년도에는 밀, 보리와 감자재배면적이 현재 19.2만ha에 이르고 있다.

둘째, 북한은 이미 60년대 초반에 농업의 수리화, 전기화 정책을 추진하여 관·배수를 자유로이 할 수 있는 수리시설을 갖추는 농업기반을 조성하여 1977년에 논은 60%, 밭은 70%의 관개율을 보일 만큼 상대적으로 풍부한 수자원과 시설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계속된 홍수와 기상재해로 인하여 많은 저수지와 제방이 붕괴되고 파괴되었다. 지금까지도 극심한 경제난과 재원부족으로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완전하게 복구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관개시설이 노후화되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데다가 양수시설도 전기로 가동되는 양수 펌프이기 때문에 에너지난으로 제대로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봄 가뭄이 심했던 2001년에는 벼 재배면적의 56%, 옥수수를 재배하는 밭은 31% 정도가 물 걱정이 없이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고 한다.

2) 농업생산에 필요한 농업자재 생산과 농기계 이용상황

북한은 일찍이 농업생산력의 증대를 위하여 농업의 화학화와 기계화를 서둘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비료사정을 보면 북한은 정권수립 후 적극적인 농업의 화학화 정책을 추진하여 일제가 건설한 흥남비료공장과 남흥, 아오지 비료공장 등 3대 비료공장을 건설하였다. 80년대 중반에는 비료생산량이 350만 톤이 생산될 정도의 자급생산능력을 갖추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와서는 원료와 원유도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일제시대 건설된 흥남비료공장마저 노후화되어 비료생산이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1996년에는 비료공장 가동률이 27%에 불과했고 생산량은 96만 톤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현재 북한의 비료 최소 수요량은 150만 톤으로 추정했을 때 매년 50~60만 톤 가량의 비료가 부족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북한의 농업기계화 실적을 보면 정부가 추진한 토지정리 사업과 농지규모 대형화와 더불어 농기계 보급률이 확대되어 1960년대 이미 9천 대를 농촌에 보급할 만큼 가히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농기계화 정책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역시 에너지난과 부품공급난이다. 외화 부족에 따른 경유 및 중유를 도입하지 못하여 농기계를 가동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농기계부품 역시 제때 제대로 조달

하지 못하여 1996년에는 7만 5천 대로까지 증가한 트랙터의 사용률이 30%선에 그치고 있다.

그밖에 농약, 비닐 등 기초 농자재도 노후화된 공장시설을 교체 확충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역시 외화부족과 에너지 및 원료부족 현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것이다.

3) 북한의 자연기후조건이 불리하고 농업생산기술 수준이 뒤떨어져 있는가

북한은 남한에 비하여 위도상으로 북쪽이기 때문에 다소 기후조건이 불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평균기온이 겨울에는 영하 19℃에서 여름에 25℃까지 지역과 계절에 따라 다양하며, 1년 중 무상기간은 160~190일 정도로 남한에 비하여 평균기온이 낮고 무상기간도 짧다. 그러나 중국의 동북 만주지역 흑룡강성에도 벼농사를 훌륭하게 짓고 있고 옥수수를 비롯하여 단위당 생산량이 남한에 못하지 않다는 것을 고려하면 결코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 작목에 따라서는 특히 감자인 경우는 오히려 남한보다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연평균 강수량도 지역간 편차가 심하나 1,054mm 내외로 적은 편이고, 강수량의 60%가 6~9월에 집중하여 북한의 산지 지형조건이 급하여 홍수의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북한 당국이 추진해 온 수리화 사업으로 건설해 놓은 수리관개시설에 비추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단지 북한의 현재 낙후된 수리시설과 농업기반시설을 복구하고 정상 가동하기에는 현실적인 에너지난과 외화부족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난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느냐가 관건이 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90년대 중반 이후 매년 북한이 당한 가뭄과 홍수, 태풍, 해일 등의 기상재해는 지구촌의 이상기후와 기상이변에 따른 특수한 현상일 뿐이다. 문제는 피해를 조기 극복하고 복구하는 데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농업생산기술의 문제인데 북한의 농업기술 수준은 전체적으로 중진국 이상의 수준이라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북한의 농업은 자연환경의 제약뿐만 아니라 정책 및 제도상의 문제로 인하여 농민의 생산의욕의 저하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리고 북한 농업의 품종육성과 육종, 재배기술 등 농업기술의 개발수준은 높은 것으로 인정하면서 단지 북한의 주체농법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갖고 생산현장에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직성과 부분적인 결함을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북한이 제시하고 있는 주체농법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학농법과 집약농법으로 정의하고 있다. 토양 및 기후조건과 농작물의 생물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는 것이며, 단위당 수확량 제고를 위한 토지

의 합리적·집약적 이용과 토지 및 기후조건을 고려한 적기작, 적지작의 원칙, 지력향상과 토양개량, 포기농사 등을 주요 농업기술체계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이론적인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북한의 기후와 지리적 조건에서 창안한 대단히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농업기술체계인 것이다.

4) 북한의 식량생산이 감소한 근본적인 원인

북한이 식량난을 극복,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근원적이고 본질적 원인은 자국 내적 요인에서보다 국가 외적 관계와 그로 인한 경제사정의 악화에 있는 것이다. 북한 농업의 사회주의 농업체제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모든 토지와 농기계 등 생산수단이 집단 또는 국가소유로 되어 있고, 농장시스템이 협동농장과 국영농장으로 관리 운영이 통제되고 계획생산과 분배제도를 하기 때문에 농민의 영농의욕이 감퇴되고 농업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북한의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논리와 잣대로 해석하고 바라보았을 뿐, 북한의 오랜 사회주의 농업체제가 갖고 있는 특성과 장점을 간과한 지극히 경직되고 편협된 판단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커다란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문제는 식량난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북한이 현재 겪고 있는 4대 경제난이 어디에서 연유된 것인가를 먼저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 원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한반도 분단과 외세에 의한 경제적 압박과 군사적 압력에서 찾아봐야 한다. 분단 반세기 동안 북한은 남과 북, 미국과 북한간의 군사적 대결과 냉전체제로 인한 막대한 군사비 부담과 미국에 의한 경제봉쇄와 제재로 국제무역이 자유롭지 못한 데서 오는 외화부족과 원유도입의 장애에 직면해 있다.

북한의 식량난, 외화난, 에너지난, 생필품난 등 4대 경제난은 결코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연계된 문제이며 북한사회가 안고 있는 총체적 난관인 것이다. 더욱이 북한은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사회주의 동맹국이던 동구 유럽과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그 동안 사회주의 국가간의 우호거래가 중단되고 중국 등과의 교류 협력이 차단되면서 경제사정이 더욱 악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1960년대부터 집중 투자하여 건설해 놓은 중화학공업부문에 필요한 원료도입과 유류 구입이 어려울 만큼 심각한 경제난에 봉착한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결국 북한 기간산업의 가동률을 20% 이하로 저하시키고 농업부문의 관련사업도 침체되어 농업생산에 필수적인 요소인 비료, 농약, 비닐, 농기계 등 각종 농자재 생산이 중단됨으로써 식량난을 더욱 가중시키게 된 것이다.

북한은 일찍이 농업의 집단화 과정에서 토지구획정리와 농지의 대규모화를 추진하였고 양수방식에 의한 관개시설을 하였으므로 원활한 유류 공급 없이는 농기계작업 뿐만 아니라 완전한 관개작업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90년대 중반 홍수로 인하여 붕괴되고 매몰, 파괴된 농지 및 농업생산 기반을 복구하기에는 엄청난 난관을 당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농기계가 노후화된 데다가 유류와 부품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농업생산 활동에 큰 타격을 주게 된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다.

북한의 국제시장으로의 진출이 봉쇄되고 상실되어 상품수출이 1997년 1,025백만\$에서 1999년에는 597백만\$로 감소하였다. 심각한 식량부족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외화부족으로 인하여 2001~ 2002년에 4만 톤 내외 곡물밖에 수입하지 못하였으며, 농업기자재 수입은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최근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단의 경제정책과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7월에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단행한 데 이어 9월에는 '신의주특별행정구'를, 그리고 11월에는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를 연이어 설치하면서 새로운 경제체제에 돌입하고 있다. 이 같은 일단의 정책들은 외국자본의 투자유치와 외화획득을 위한 대외 경제개방조치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북한경제 회생을 위한 핵심적인 과제인 에너지(전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설 추진중에 있는 대규모 수력발전소를 조기에 완성하는 것과 함께 도·시·군 단위의 중소형 발전소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조-미간 기본합의서에 의하여 추진하여 온 경수로발전소 건설 사업도 그 일환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일방적인 협약파기와 중유공급을 중단함에 따라 난관에 봉착하게 됨으로써 북한은 중단했던 원자력 발전소를 재가동하려고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일은 바로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에너지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미국은 핵개발의 의혹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반도 전쟁위기상황을 조성하고 남북관계 정상화와 북한의 개혁개방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북한의 상황을 종합하여 봤을 때 북한의 농업과 식량난 문제를 단순히 북한 농업 내부의 문제로 접근하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현재적인 농업생산 능력을 발휘시키는 것만으로 그 해결 방향과 방안을 찾을 것이 아니다. 북한 경제가 안고 있는 총체적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인식해야 할 것은 민족의 자주권과 민족생존권문제이다. 보다 본질적 차원에서 문제를 접근하고 본원적 문제를 해결하여 나갈 때만이 북한의 4대 경제난 해결은 물론 북한농업의 발전과 새 세기의 북한 경제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4. 끝마무리를 하면서...

이상에서 남한의 농업문제와 북한의 농업 및 식량문제를 살펴보았다. 남과 북의 문제는 서로 다른 경제체제와 사회구조 속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본질에 있어서는 외세와 민족간의 모순에서 발현된 것이다. 따라서 남한 농민이 주창한 민족농업과 통일농업건설은 바로 남북한 우리 농민이 힘을 합쳐 일구어 나가야 할 방향이며 이정표이다. 남한의 농촌·농업·농민의 문제는 물론 북한 동포가 고통받고 있는 4대 경제난 문제는 우리 민족 모두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민족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반외세 자주화와 조국의 자주적 통일뿐이다. 한반도 전쟁위기를 조성하고 민족의 경제를 압살하며 민족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한반도를 영구히 지배하고자 하는 미국의 패권주의 전쟁책동과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를 깨몽개고 나가야 한다. 그야말로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일구어 나가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고한 민족공동체의식과 통일된 조국을 지향하는 민족자주의식이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외친다.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민족농업 지켜내고 조국통일 완수하자!”고.....

사월혁명회보 제69호(2003.8)